



김정일 체제의 대외경제정책 전망

오병훈 / 고려대 강사, 행정학 박사

김정일의 수석직 승계 일정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김정일 체제' 운운하며 그 정책을 전망한다는 것은 일견 부모한 시도일지 모른다. 그러나 공식적 최고지도자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현실적 상황은 북한의 정책방향을 오히려 선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에 대한 분석의 대부분이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해 온 반면, 통치엘리트 집단의 속성 내지는 정책결정 메카니즘과 같은 제도적 측면 등 최고지도자의 행위를 제약하는 여러가지 변수에 대한 고려에 너무 인색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최고지도자 없는 북한의 모습은 북한체제의 본질에 더욱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종래의 시각에 따르면 북한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중심으로 완전한 유일체제를 구축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다른 정책노선이나 갈등집단이 전무함으로써 현재 북한 통치엘리트 내에는 어떠한 정책대립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최상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정책결정 및 집행만이 가능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구사하고 있는 정책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상충되는 정책들간에 적지않은 대립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치도덕적 자각과 물질적 자각, 균중노선과 과학적 경제관리, 속도와 균형, 량과 질,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 유일적 지휘와 집체적 지도, 중앙계획통제와 가치법칙, 자력갱생과 무역제일주의, 계획의 일원화와 독립채산제 등이 그것이다. 전자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운영논리에 기초한다면, 후자는 다분히 자본주의시장적 성향을 띤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북한의 체제는 그동안 상충되는 성격의 정책들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논리를 강조해 왔다. 지금까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성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 경제정책에서 균형의 논리

북한은 종래 경제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서로 배타적이라고 생각되는 개념들을 역설적으

로 결합시키려고 시도해 왔다. 1956년 종파투쟁의 명분이 되었던 중공업우선발전, 경공업우선발전 노선간의 갈등도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키고, 동시에 경공업-농업을 발전시킨다’는 식으로 절충되었다. 이후 국가 산업구조가 어느정도 틀이 잡혀가면서 근로자들을 움직이기 위한 유인의 제공에 있어서도 정치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적절한 결합으로 마무리되었다. 북한 경제정책에서 균형의 논리는 정책내용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충되는 정책이 동시에 제시되는 데는 그러한 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엘리트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은 국내경제의 자립적 건설을 주장하는 입장과 대외개방을 주장하는 입장간

의 통치엘리트내 정책갈등의 측면에서 다루어 져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갈등이 상존하는 북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최고지도자의 역할은 상충되는 정책을 적절히 절충하는 정책조정자로서의 위치로 평가절하되어야 한다. 그동안 남북한의 정치적 역정을 살펴보면 군사혁명과 학생혁명 등으로 점철되었던 편은 오히려 남한이었으며, 북한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차이가 단지 북한 최고지도자의 전횡적 독재에서만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책

결정에 있어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절충주의는 북한 정치체제가 큰 시련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절충주의는 김정일체제에 이르러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김정일의 성장과정과 권력자로서의 부상과정은 김일성과는 달리 엘리트 교육의 표본과 같은 것이다. 1970년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벌어진 엘리트간의 갈등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의 엘리트 정치는 더욱 정교해졌다고 볼 수 있다. 최고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위치는 카리스마에 의존하기 보다는 결국 소수 엘리트

“

최고지도자와 전문엘리트간의 정책연합은 새로운 정책의 산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북한 정책결정체계의 특이한 종적 정책연합(vertical policy coalition)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수파, 개혁파 엘리트간의 정책갈등을 적절히 절충하여 자신의 위치를 공고화시키는 성향을 갖게 된다. 최고지도자가 절충노선을 취했을 때 권력은 최고지도자에서 통치엘리트 쪽으로 점차 중심을 옮기게 되는데, 1992년 4월 북한의 개정헌법에서 나타난 권력분산 즉 종래 국가주석에 집중되었던 권력을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등으로 분산한 사실은 최고지도자와 통치엘리트간의 권력관계 변화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최고지도자의 정책성향이 절충주의로 변해가면서, 최고지도자와 통치엘리트는 상호의존관계에 있게 되며 통치엘리트를 구성하는 권력엘리트와 전문엘리트간의 관계는 대등한 위치

에 있게 된다. 이때 정책연합의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최고지도자와 권력엘리트간의 정책연합은 현상유지 혹은 보수적 성향의 정책을 산출하게 되나, 최고지도자와 전문엘리트간의 정책연합은 새로운 정책의 산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북한 정책결정체계의 특이한 종적 정책연합(vertical policy coalition)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설명에 있어서 정책연합의 개념은 얼마나 설명력을 갖는 것일까?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특구 설정의 계기가 되었던 1991년 12월 24일 제19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들 수 있다. 동회의에서는 북한 통치엘리트내에서 중대한 권력관계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1991년 12월)의 결과와 그 대응정책이 토론되었는데, 이때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을 주장하는 개방-개혁파의 견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조직개편에서는 강석주, 임수만 등 개방성향의 신진엘리트들이 대거 부상하게 되고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명실공히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등장함으로써, 그동안 정체상태에 있었던 대외경제부문은 활성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자유경제무역지대설치에 관하여」(1991년 12월 28일)를 시작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

추어 볼 때, 1990년대 초반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정, 1992년 신무역체계의 수립 등 일련의 북한 대외경제정책 변화는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로 더욱 구체화된 김일성-김정일 간의 '이중권력구조' 그리고 개방-개혁엘리트의 부상으로 초래된 보수파, 개혁파 엘리트간의 권력관계 변화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실질적인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일의 등장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통치방식이 절충주의 성향으로 변모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와 개방-개혁엘리트간의 종적 정책연합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제언

작년 7월 8일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권좌를 차지해온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북한내의 동향은 전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저명한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는 김일성의 사망이 곧 북한의 붕괴 내지는 엄청난 정치적 사변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은 쉽게 적중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내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실각이 기대되던 김정일이 10월 29일 건장한 모습으로 단군릉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도자로서 김정일의 부상을 반신반의하던 일부 시각에서 볼 때, 김정일의 등장으로 한반도는 다시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

는 우려에 찬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관점에서 김정일은 버릇없이 자라 졸지에 유산을 물려받은 방탕한 재벌 2세 따위로 비추어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전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김일성 주석 애도기간이 지속되면서 간간히 언론과 방송에서 소개되는 북한내의 동향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으며, 오히려 이러한 상태는 폭풍의 전야와 같은 조용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애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민무력부장이었던 오진우가 신병 치료를 이유로 파리를 방문하고, 북한정부는 당시 한국정부가 발

표한 경험활성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도 중국에 자사를 두고 있는 북한의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와 남한 기업들간에 경제협력을 위한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당시 이홍구 부총리

의 발언에 접하면서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을 주도해온 최고권력층내에서 모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상을 더욱 확신하게 된 사건이 1994년 11월 4일 노동당 당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된 김정일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제하의 논문이다. 이 글에서 김정일은 “인민대

중 중심의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근거는 인민대중이야말로 나라의 주인이며, 전인민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맡은 분야에 충실한다면 외세로부터의 어떠한 압력도 분쇄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상적 자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일의 등장은 일단 그들이 말하는 ‘정치사업’이 더욱 중시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논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일지도체제의 통념에서 벗어나는 몇가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우선 김정일은 인간의 집단주

“
김정일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주장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과학적인 사상임을 공언하기 보다는 북한사회주의의 성패가 체제의 과학적 운용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 북한이 정치, 경제, 문화 제반 부문에서의 실용주의를 지향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적 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사회적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사회적 집단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애국·애족 사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또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고 교양 개조하여 사용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일은 더이상 사회주의적 순결성에 집착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동안 권력의 핵심에서 배제되어 왔던 실용주의적 엘리트층을 기용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이 가능한 것은 김정일 논문이 발표된

직후 북한 언론에서 연일 거론되고 있는 일련의 지지선언에서 실용주의 엘리트들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남, 김달현이 바로 그들이다. 홍성남은 1986년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다가 채포된 경험이 있는 경제관료로서, 강경보수파의 견제로 인해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 정부원 부총리를 담당하고 있다. 김달현의 이름은 직접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그가 1993년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에서 경질된 이후 지배인으로 임명된 2·8 비날론연합기업소가 매일 비날론 생산계획을 1.2배 초과달성하고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수많은 연합기업소중 그 기업만 유일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1993년 12월 김달현의 후임으로 임명된 홍석형이 그가 담당하고 있던 청진소재 김책제철소에서의 성과를 발판으로 권력의 핵심에 중용되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가까운 장래에 김달현의 재등용을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일의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사회계급적 처지가 같지 않아도 서로 믿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데, 이는 북한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인 당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실속없이 세도만을 내세우면서 특권층화되어 가는 이념 엘리트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김정일은 엘리트 등용에서 이념성보다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신세대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것임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의 권력 중

심이 점차 김정일을 중심으로한 신진엘리트로 이동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최고지도자와 전문엘리트 간의 종적 정책연합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일성 시대 북한의 카리스마 정치가 김정일의 등장을 계기로 집단주의적 엘리트 정치로 변질되어 가는 조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논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광폭정치'는 바로 일인지배체제가 엘리트집단 지도체제로의 변질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주장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과학적인 사상을 공언하기 보다는 북한사회주의의 성패가 체제의 과학적 운용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 북한이 정치, 경제, 문화 제반 부문에서의 실용주의를 지향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완충기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과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국내경제 상황 즉 산업발전 정도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러한 산업발전을 지금까지 가능하게 한 경제정책은 얼마나 현실적 대응능력을 갖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보아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은 그러한 국내 경제정책의 연결선 상에 위치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국제경제와 국내경제를 연계시키는 가교로서 위치시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일단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르는 산업구조의 변동과 연계되어 변화 과정을 겪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 국내경제의 정상화 여부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국내수요 증대에 조응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당시 경공업위원회 부위원장 이길두는 자재, 원료가 부족할 경우 다른나라와의 경제교류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김달현은 우선 대외부역을 더욱 발전시키지 않고는 수입원자재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정상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는 사회주의 형제국과의 경제교류 단절로 야기된 예기치 못한 체제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의미가 컸다는 점에서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전후한 양시기의 정책변화가 갖는 의미와 정도는 크게 구별된다. 다시말하면 1984년 합영법으로 특징지워지는 1980년대의 대외개방조치가 내생적 요인에 의한 정책변화였다면, 1991년 12월 나진·선봉 경제특구 설정에서 시작되는 1990년대의 개방조치는 외생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후자의 정책변화가 비록 외생적 요인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그 대응정책의 내용은 북한 경제규모의 확대라는 내생적 요인에 기초한 정책성향이 그

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 동안 무역액을 3.2배 성장시키기 위한 대외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대외경제발전전략의 제1과제로서 생산과 무역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양자를 밀접히 연계시키고, 제2과제로서 공동생산,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대외경제관계 전체를 폭넓게 심화·발전시키며, 제3과제로서 대규모 수출품생산기지에 의거하여 무역을 비롯한 대외경제활동 전반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제1과제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1992년 12월 11일)에서 단행된 무역부, 대외경제사업부, 대외경제위원회 등의 복수 대외경제부서를 대외경제위원회에 통합시킴으로써 그동안 방만하게 진행되어온 대외무역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려는 조치로서 마무리되었으며, 제2과제는 일련의 외국인 투자관련법 제정에 발맞추어 1993년 10월 13일 「과학연구 및 신기술도입계약에 관한 규정」이 정무원에서 승인됨으로써 큰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제3과제는 최근 「근로자」(1994년 제3호)에서 리신효가 “수출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라고 밝힌 바와 같이 제3차 7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완충기(1994~1996)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완충기 대외무역정책의 방향은 1)수출품생산기지의 확충과 함께 2)제품의 질을 제고하는 문제

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수출품 생산기지의 확충

우선 북한은 수출품생산기지를 확충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수출원천이 있는 모든 곳에 크고 작은 가공기지를 설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어온 나진-선봉 경제특구지역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실상 1991년에 결정된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입지선정은 종래의 소극적 정책에 비하여 크게 진보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로부터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다분히 국토의 균형적 개발이라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논리 혹은 자본주의 이념의 침투로 인한 사상적 오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기초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앞서 제시한 리신호의 글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외개방자세가 아직도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외국 투자자에게 투자유인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왔다는 점을 북한의 정책결정자들도 절감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1994년에 들어오면서 북한 정부가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신의주, 남포, 원산, 개성 등지로 서서히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나진-선봉지역의 설정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굳이 나진-선봉의 입지 선정이 가지는 의미를 찾자면, 1990년

들어 UNDP 주도하에 추진된 두만강 개발사업에 편승하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재원 및 개발자금조달의 방법, 중국-북한-러시아간의 이해관계 조정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두만강개발이 본격화되어 이윤을 내기까지는 수십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구 사회주의권 형제국과의 우호무역 단절로 심화되는 경제상황에 봉착해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이 지역에 계속 집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 다시 수출품 생산기지의 확충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논리에 기초한 대외개방정책이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확대라는 시장경제적 논리의 득세를 말해준다. 따라서 수출품생산기지 확충의 문제는 전력,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게 들어가는 기존의 산업지역을 활용하여 그것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하는 형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북한이 자국자본이 아닌 외자도입을 통해서 산업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특구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그만큼 외국투자자의 편의와 발언권을 존중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제품의 질 제고와 생산성 증대의 문제

북한은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은 수출상품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출상품구조에서 원료보

다는 반제품의 비중을 높이고 반제품보다는 완제품의 비중을 높여야 같은 양의 자원을 가지고도 더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의 수출은 철광석, 도토리-송이버섯 등 농산물, 해산물 등 1차산업 제품이 주류를 이루어 왔지만, 이러한 원료를 가공하여 2차, 3차 가공제품의 수출을 통하여 외화가득율을 몇배로 신장시키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개재되는 문제가 기술과 현대적 생산설비의 문제이다. 그러나 북한이 제시하는 정책수단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기 지방, 자기 단위의 수출원천과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수출품의

가치수를 늘려야 한다는 투입(input) 부분의 증대를 통한 생산량 제고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북한 정부가 “제품의 질제고를 통해 수출품생산에 투하

된 노동단위당 외화획득량을 제고한다”는 산출(output)부분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성장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기술과 생산설비를 통해 얼마나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외시장의 요구에 맞게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력과 생산설비의 총동원도 중요하지만, 이미 경제적-상품적 수명이 끝난 노후된 생산설비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 수출품의 질 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 선진기

술 도입이 불가피한 것이다.

최근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우는 미국언론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첨단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소득세율을 10%로 낮게 설정하고, 이것도 3년간 면제해 주고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주는 등 각종 특혜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대명제가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시장적 요소의 유입이 불가피한 대외경제부

“ 1994년에 들어오면서 북한 정부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신의주, 남포, 원산, 개성 등지로 서서히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나진-선봉지역의 실정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

문의 개방 속도와 정도에 대한 내부적인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집권적 통제 경제의 특징이 아직도 경제지도일군과

근로자들의 업무관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단위노동당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합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경험자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조총련계 재일상공인 고 전진식씨가 일본 「세계」지(1994년 10월)에서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더욱이 합영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이 당과 국가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관료들은 수시로 근로자들을 근로

봉사나, 군사훈련에 동원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자본주의 이윤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사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통제경제의 관행이야 말로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입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북한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성격과 자본주의 시장적 요소간의 지속적인 갈등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상유지 성향의 보수적 엘리트와 개방·개혁 성향의 전문엘리트간의 정책갈등과정으로 치환되며, 이때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상충되는 정책성향을 절충하여 체제의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대외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질적 정책간의 갈등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북한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 여부는 점증하는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이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성향의 극복을 통해 어떻게 정착해 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을 통해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만성적, 구조적 경제위기가 어느정도 해결된다면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개방성향의 엘리트들의 위상은 좀더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좀더 범세계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는데 가속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의 등장과 신진엘리트의 부상은 개방적 정책연합의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이는 종래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성향에 기초한 나진-선봉 경제특구 설정이 좀더 발전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확산되어갈 가능성 그리고 노동력과 열악한 자원을

“

북한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성격과 자본주의 시장적 요소간의 지속적인 갈등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상유지 성향의 보수적 엘리트와 개방·개혁 성향의 전문엘리트간의 정책갈등과정으로 치환되며, 이때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상충되는 정책성향을 절충하여 체제의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조치를 통한 투자유인 증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아직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운용을 통해 관행화된 기업에 대한 관료의 개입과 근로자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향후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2]

동원한 투입부문의 증대를 통해서 생산량제고를 추구했던 산업부문이 적극적인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산출부문의 질적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말해준다.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이 좀더